제도 개혁 '험로'… 대사회 역량 '순항'

[분석] 키워드로 읽는 조계종 종책과제

신성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서 다양한 종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종책과제들을 △대탕평 조치 △선거제 개선 △문화유산 인식 개선 △대사회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분석했다.

대탕평 조치 01

설정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비롯한 대탕평 정책에 대해 과거 여느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냈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대중 공의를 모아 대화합을 선언하는 법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대표적 사건인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 파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멸빈자 사면은 종헌 개정이 필요한 중대사인데다 중앙종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이 지난해 신년교시를 통해 멸빈자 사면을 우회적으로 제안하고,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사면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중앙종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님오신날 전 대사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선 오는 3월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사면에 대한 대중공의를 모으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헌개정안은 또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종헌개정안은 부칙 삽입으로 1회에 한해 사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종헌 위상 저해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A중앙종회의원은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대사면에 동의하더라도 종헌종법에 따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과 종헌개정안의 수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선거제 개선 02

선거제도 개선은 10여 년 전부터 공론화된 조계종 숙원사업 중 하나다. 13대 중앙종회부터 꾸준히 안건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될 만큼 중앙종회 내에서도, 종단 내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16대 중앙종회서는 직선제와 종정이 추첨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현재 '원점 재검토' 중이다. 다만 설정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모든 선거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봉축행사 전 대탕평
-3월 임시종회 결과에 달려

율장 근거한 선거제도
-임기만료 앞둔 중앙종회 '변수'

문화재 지원 형평성
-취지 논리적… 가능성 '미지수'

민영소년원 운영 추진
-법무부와 교감 '긍정적 기류'

B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스님 발표 내용 중 '종도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회를 비롯해 모두가 선거로 인한 폐해를 공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교적이고 바람직한 선출제도를 고민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종회도 더 활발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6대 중앙종회 임기가 올해 10월 만료돼 안건 처리에 대한 체감온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은 입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이 경우 17대 중앙종회가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문화유산 인식 개선 03

설정 스님의 신년기자회견 세 번째 키워드는 '전통문화 인식 개선'이다. 설정 스님은 전통문화를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는 관행과 국유 문화재로 예산이 집중되는 현 문화재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설정 스님이 후보 당시 제시한 10대 기조 공약 중 하나이며, 앞선 자승 스님 집행부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제안한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전체 문화재의 3.6%인 궁궐, 왕릉 등 국유문화재에는 1066억여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23.5%를 차지는 조계종 소유 성보 문화재에 대해서는 486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를 1건당 예산액으로 환산하면 국유는 9억 3500만원에 달하지만 조계종 소유는 6600만원에 그친다. 국유 문화재는 비율은 낮으나 민간단체 소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받는 상황이다. "궁궐과 왕릉은 면단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밖의 문화재는 점단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이 제시한 정책 카드는 '민간문화재를 전담 · 지원하는 국가 조직 신설'이다. 조계종이 제언한 제19대 대선 정책제안집에 따르면 이는 현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재 전담 부서와 민관협력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유에 집중된 문화재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다. 국유를 제외한 불교문화재를 전담하며 지원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사회 역량 강화 04

설정 스님이 종단 대사회 역량 강화로 꺼내든 대표적 카드는 '민영소년원 운영'이다. 법무부 또한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교계 등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면서 "조계종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불교계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조계종과 법무부 측은 최근 민영소년원 설치에 대한 교감을 나눈 바 있다.

불교계가 민영소년원을 운영을 확정지으면 이는 국내 최초 민영소년원이자 불교계 유일의 교정시설이 된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설정 스님은 평소 청소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계기로 법무부와 뜻이 맞아 떨어졌다. 좋은 취지로 민영소년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대표단 교차방문, 문화유산 공동보존관리 협의 등을 종책과제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만 조계종 대북종책을 담당하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분위기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설 전망이다.

하승창 청불회장 1월 30일 취임법회

조계사서 각 종단 대표 참석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취임한다.

청와대불자회는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연기된 신임회장 취임법회를 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자, 불교계 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하승창 수석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하 수석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계종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총무원장 선출 개선, 6월 종회 '분수령'

조계종 중앙종회 특위, 선거제 재검토 시작
내달 공청회 의견수렴… 타국가 제도 검토도

조계종 숙원사업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이 오는 6월 중앙종회 임시회를 겨냥해 추진된다.

제16대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세미나 ·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안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서는 1994년 종단 개혁 이전과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13대 중앙종회부터 이어져온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특위는 오래 전부터 진행된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가 현재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공감, 불교적이고 종교적인 선출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선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의하고, 6월 원포인트 종회를 예상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타종단 및 남방불교국가의 지도자 선출방법과 율장에 근거한 지도자 추대 방법 등을 정리해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위원을 위촉해 오는 2월 공식적인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밖에 회의서는 선출제도보다 선거법 강화와 준용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평 스님은 "현행제도가 나쁘다고만 볼 순 없다. 문제는 현행제도를 제대로 준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감 스님도 "선거제도가 불교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런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고 본다"며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추가 원외위원으로 진화(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 덕문(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현진(교육아사리) · 목종(부산 대광명사 주지) · 법선(광주 문빈정사 주지) 스님을 위촉했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 잘 돼야 한국불교 근사해져"

설정 스님, 전국비구니회 예방서… 소통 · 화합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에게 소통을 중심으로 한 비구니 화합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과 부회장 일진 스님 등 임원진을 만나 "비구니회가 잘 돼야 한국불교가 근사해진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니 서로 대화하며 모든 일을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 이에 육문 스님은 "열심히 하겠다. 총무원장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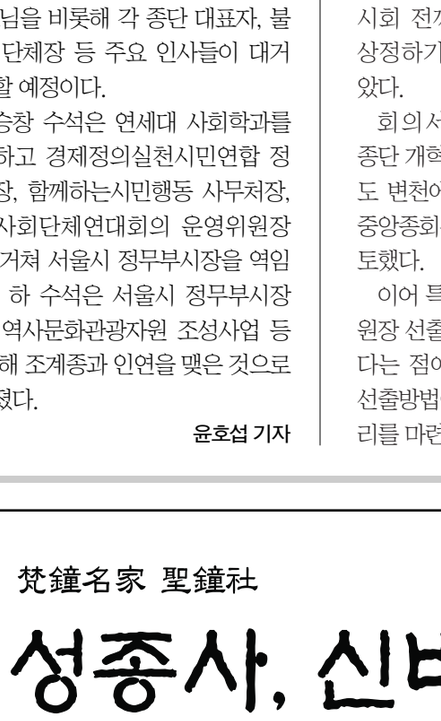
설정 스님의 이 같은 당부는 2014년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추천과정서 시작된 내홍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해 10월 100여 명의 비구니스님들은 '열린비구니모임'을 구성하고, 전국비구니회 종회의원 선출에 관한 회칙이 종헌종법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점차 확산돼 2015년 3월 600여 명의 비구니스님이 모여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차기회장 선출 총회서 육문 스님이 회장으로 추대됨에 따라 내홍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전국비구니회가 2016년 비구니 의원 제명을 결의하면서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설정 스님은 "복지분야부터 사찰음식까지 현대사회 비구니 역할이 크다. 비구니회가 내규를 잘 만들어 앞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梵鐘名家 聖鐘社

성종사,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2017년 제작된 신라대종(5300관)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마모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복원

성종사가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였습니다.

감리를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종과 거의 흡사하며, 여음의 경우 오히려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sungjongsa@hotmail.com